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99
----------	-------

발의연월일 : 2022. 1. 27.

발 의 자 : 홍석준 · 김성원 · 김정재
추경호 · 구자근 · 윤창현
이 용 · 지성호 · 김태호
이종배 · 김승수 · 조명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임.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6항).

다.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라.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된 업종 변경 가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5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초공제)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취임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1. <u>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된 업종 변경 가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 ----- ----- -----5년----- ----- -----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다. (생략)

2.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가. -----5년-----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5년-----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
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
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생략)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
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
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

-----.

--.

1. -----

가. -----

-----50-----

나. -----

-----경우

(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

하지 아니한다)

다. (현행과 같음)

<삭제>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
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
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
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
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
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
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마.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
는 경우

2. (생 략)

⑦ ~ ⑪ (생 략)

<신 설>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의 100분의 80에 미달하
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초공제)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
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2
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
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
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
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
행,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
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
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
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사업
자의 경우 대표자)로 취임
할 것